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8~10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박근혜의 위기

4~5면

도이체방크
파산 위기,
새로운 위기의 전조?

5면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과잉 생산 위기

6면

트랜스젠더
해방을 위한 투쟁

12~13면

미국 대선,
유럽 난민 위기

7, 14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병사 아닌
국가 폭력

2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흑인 사회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나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겠다. 나의 아름다운 퇴장을 원한다면 투표하라.”

오바마의 협박, 흑인에 대한 총기 사실이 여전한데 아름다운 퇴장?

“선거제도가 정착한 나라들 중 단식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

2014년 이정현, 세월호 특별법 제정
더민주당 릴레이 단식을 비난하며

“잡아가, 잡아가. 김밥 드실 시간은 주셔야지. 저녁도 굶고 이렇게 학대합니까? 이견 인격침해예요”

필리밥스터 중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많은 모금을 한 것도 역시 많은 준비가 있었고 각 기업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

황교안, 몇 개월 만에 8백억 원을 모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능력은
아름다운 기부 덕분?

“비상사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은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할 것”

레임덕 ‘비상사국’에 온갖 스캔들이
터져 머리가 “혼란”한 박근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헬조선에서 또 다른
헬조선으로 오라는 박근혜

“역대 미스 유니버스 중 최악이었다. 그녀가 몸무게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였다”

트럼프,
한 미스 유니버스 출신 여성에 대해

“원전이 지진을 맞거나 또 폭격을 당할 때 폭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위기에 노출되어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무성의 한수원 견학 소감,
지진 나면 원전으로 가길

“평소엔 개, 돼지 취급하면서 파업할 때만 귀족 노조, 이런 프레임이젠 안 통한다.”

서울 지하철 옥수역에
붙은 파업 응원 메시지

“아빠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이 땅에 정의는 꼭 돌려 놓겠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 씨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 수 있다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3백 17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불법 시위를 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과를 받으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을 살인미수로 고발했지만, 오히려 법원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인이 명백한데도 경찰은 부검을 요구했다. 검찰은 유가족이 원치 않는 데도 부검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유가족과 협의 하에 부검하라는 조건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장례식장 주변에 3천6백여 병력을 배치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마저 차단하려 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박근혜 정부에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서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은 ‘더는 살인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은 최근에 2013년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이후 요구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재천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빈민 단체들도 ‘정권 퇴진’을 지지했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박근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표현한 것이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백남기 투쟁본부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특검들처럼 번죽만 울리고 끝나지 않으려면 정권을 향한 항의가 강력히 이어져야 한



“살인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에 쓰러져 3백 17일만에 숨진 백남기 농민.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다. 그래야 책임자 처벌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퇴진 논쟁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패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를 ‘살인 정권’이라 규정하고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그런데 논란 끝에 ‘박근혜 퇴진’을 명칭과 구호로 내걸지 않기로 했다.

백남기 대책위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살인 정권으로 규정한 이상 규탄이 아닌 퇴진으로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이 이를 반대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

대행의 제안을 상집 성원이 대놓고 반대하는 모양도 불썽사나왔는데, 더 나아가 대표자 다수와 농민·빈민 단체들이 퇴진을 지지하는데도 저 혼자 반대했다. 결국 백남기 농민이 속한 가톨릭농민회의 요청으로 ‘퇴진’이 아닌 ‘규탄’으로 확정했다.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은 이전부터 “퇴진” 요구를 반대했다.〈매일노동뉴스〉, ‘대통령 퇴진 그만 외치자’ 이것은 민주노총 내 오른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퇴진 요구는 논쟁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논의를 통해 공식 결정한 사안을, 개인 자격이 아닌 민주노총의 직책(사회연대위원장)을 걸고 그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규율에 위배된다.

사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자신들의 정치적·정책 노선과 맞지 않

는 인물을 사회연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무원칙한 인사이기도 하다.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은 박근혜 퇴진을 앞세우면 생협 등 풀뿌리 단체, 시민단체들이 백남기 투쟁본부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외연을 넓히지 못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실제 동학은 그의 민중주의적 계산법과 다르다. 노동자 운동이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면서 정치·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 중간층을 견인해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최종진 직무대행이 “퇴진” 요구를 주장한 것은 민주노총이 살인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자, 11월 민중총궐기 건설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최영준

11월 12일 다시 민중총궐기에 나서자

9월 20일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중총궐기투본)가 발족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민중단체들이 모여 11월 12일에 민중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올해 민중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성과연봉제·퇴출제 등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 전반의 후퇴를 노리는 노동개악 저지,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드 배치 저지 등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 3년 악행에 대한 분노를 모아낸 자리였다. 이러한 분노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2016 민중총궐기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서, 차곡차곡 쌓인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몰려 있

다. 미르·K스포츠 재단 스캔들, 정권 실세들의 부패 추문 등이 동아시아에서 의 미·중 간 긴장 고조와 경제 위기라는 더 근본적인 요인들과 결합돼,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밀리면 정권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버티며 노동계급을 공격한다. 또,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명분 없는 부검 시도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강력해서가 아니라 위기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저항해야 한다. 올해 민중총궐기가 그 구실을 해야 한다.

민중총궐기가 민주노총의 파업과 결합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



민주노총이 단호히 투쟁하며 대중의 누적된 불만을 결집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민중총궐기의 핵심 부대인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결집을 꾀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파업에 돌입하자 청년·학생, 비

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지지가 커지고 있다. 만약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파업을 확대·강화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최영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과단성 있게 싸우면 저지할 수 있다

이정원

9월 27일 시작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다. 파업 첫 주 내내 노동자 수만 명이 동참했고 29일에는 5만여 명이 모여 기세를 보여 줬다.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의 시작을 알린 9월 23일 금융노조 파업은 비록 대형 시중은행들의 동참이 적었지만, 정부와 사용자들의 방해 공작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

공공부문 파업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쓴 비리부패 정권이 노동자들더러 “이기주의”, “철밥통” 비난하는 것은 위선으로 여겨졌다. 정권의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며 자신감을 북돋웠다.

이 속에서 공공부문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는 구실을 했다. 노동운동 내 일부는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걱정을 했지만,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파업으로 맞서자 지지가 늘어났다.

실제로 파업 기간 동안 여러 지하철역에 이 투쟁을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철도 노동자들은 대학들을 찾아 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고 지지로 화답하는 대자보가 이어졌다.

정당당 이정미 의원은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해, 일명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 중지법’을 발의했다. 모든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때 노조(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 94조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취업규칙에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달아, 이미 공공기관 이사회 등을 통해 취업규칙이 개정됐다 해도 다시 합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더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이 벌어지는 동안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 노조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일방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자, 강경 입장을 고수한 정부는 뿔떠름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 투쟁은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추진, 세월호 특조위 종료 등에 항의하는 정치적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 10월 1일 범국민대회와 세월호 집회는 주최 측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열렸다. 집회 대열의 다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었고, 다른 부분의 노동자들과 청년들도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거리로 나섰다.

우호적 여론

요컨대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 실업의 주범인 양 비난했지만, 이는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분위기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정부의 ‘불법’ 공세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공공부문 노동조건 악화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낳는다 9월 29일 여의도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파업 결의대회.

못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은 조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부패한 반노동 정권에 맞선 저항을 고무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자본주의의 동력인 이윤에 타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덕분에, 노동자 투쟁은 계급세력관계를 바꾸는 데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거듭 이런 힘을 보여 주기도 했다. 2013년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이 상당한 지지

를 이끌어냈다. 비록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유약해 승리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지금 노동개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임금 공격에 맞선 전투가 두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동안, 현대차 노동자들도 12년 만에 하루 전면 파업을 벌였다.

노동개악이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 준

다. 정부는 올 초 취업규칙 일방 변경과 쉬운 해고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강경하게 공격했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점점 더 심화되는 정치 위기 속에서 공격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조선일보〉가 ‘고임금 투 톱’ 노조가 임금을 올려 달라고 생떼를 쓴다거나 ‘공기업 노동자들이 놀고먹으면서 임금을 받는 것도 비리’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것도 속내는 노동개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전 편집인이 추악한 부패와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이런 비난은 역겹다.

국회가 재가동됐지만,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 폭력, 우병우 게이트,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사드 문제 등 심각한 정치 현안이 박근혜 정부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노동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 혼란을 이용해 과단성 있게 투쟁을 밀고 나가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단호하게 파업을 유지하며 연대를 확대하자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업의 주축인 철도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다른 사업장에 본보기로 삼기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형사 고소, 1백41명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일방 추진’에 반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신경질을 부리며,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서울시 공기업들에 추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밝혔는 데도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집요하고 표독스럽기는 해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정권의 강경 모드는 노동개악 전선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만만찮게 공격을 밀어붙일 테세다.

그런 점에서 부산지하철노조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연 파업을 접은

것은 유감이다. 이는 부산지하철에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공공부문 공동 파업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창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며 기세가 올라가던 때,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파업 중단 수순을 밟은 것도 아쉽다. 이 두 노조는 서울시로부터 ‘일방 추진을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보듯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도 조만간 압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 파업이 성과를 거둬 정부가 일정하게 물러서게 만들지 못한다면 말이다.

현재 정부가 각계각파에 나서 파업 대열을 약화시키는 것에 맞서 더 이상의 이탈이 없도록 파업 대열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파업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철도공사 사측은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 투입도 모자라, 최근 아예 대체인력 신규

채용까지 시작했다. 이를 막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파업 효과를 파괴하는 이런 대체인력 투입을 막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층의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더민주당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위해 나서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파업을 유지·발전시키기보다 새누리당을 압박해 ‘대화 국면’을 끌어내자고 말한다. 그러나 박근혜의 강경 대응에 맞서 이미 이사회에서 강행 통과된 성과연봉제를 무효화하려면 투쟁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더민주당이 성과연봉제 자체에 반대하지 않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화물연대

노동자 연대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마침 화물연대가 10월 10일 파업을 예고한 것은 매우 반갑다. 화물연대도 정부의 법 개악으로 화물 노

동자들의 처지가 더 악화되는 것에 반대에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파업으로 화물 수송물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 정부는 도로 수송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에 나섰다. 이런 때 화물연대 파업이 결합되면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는 더 커질 것이고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며칠이라도 파업을 앞당긴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현대차 노동자들은 각자 싸우지만 동시에 싸워 힘을 얻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현대차 파업에 반가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처럼 각각의 투쟁은 서로 연결돼 있다.

지배자들이 노동자 투쟁에 대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하나의 계급으로 대응하듯, 노동자들도 연대를 강화해 계급투쟁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급전작하 위기 — 저항을 건설하자

김문성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야당 규탄 단식을 7일 만에 중단했다. 국정감사 거부도 중단하기로 했다.

애초 이정현의 단식은 박근혜와 직결된 권력형 부패 의혹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서 부패 스캔들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국감 거부 방침이 당내에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프레임 전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의혹 → 여야 간 대권 진흙탕 싸움)

그러므로 비장함보다는 비웃음을 더 많이 산 이정현의 단식은, 집권당 대표가 ‘밀실 단식’ 퍼포먼스를 벌여야 할 정도로 이 정부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 줬다.

박근혜는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 자체가 레임덕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지금은 레임덕 위기를 막으려 무리수를 둘수록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커져 가는 상황이다.



다중적 위기 박근혜는 경제 위기, 권력형 부패 추문,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고 임기 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자 투쟁이 버티고 있고, 구조조정 시도 등이 지배계급의 단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다중적 위기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박근혜 정부

총선 참패 이후 박근혜 정부에게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총선 직후에는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부각하며 지지를 회복을 노렸지만, 오히려 구조조정의 속도와 방법,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 이해 다툼만 거세졌다. 정권과 기업주들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낸 한진해운 파동이 한 사례다.

롯데와 대우조선을 털다가 의도치 않게 현 정권의 대우조선 부실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려던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도리어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우파들을 단합시키는 의제인 안보 문제도 부각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텃밭이라던 경북 성주에서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지금은

김천시로 저항이 번졌다.

게다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는 경북 경주와 울산 일대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정부의 대처 능력 부실이 또 드러났다. 영남이 오히려 지지율 추락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를 시작으로 최순실, 안종범 등 최측근 비리가 줄줄이 폭로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정치자금 모금 의혹에는 박근혜 자신이 연루된 걸로 보인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김재수 임명 강행도 악재가 됐다.

한마디로 뭘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노동자 파업을 두고 불법 운운하며 협박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 세월호에 대해 아비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릴수

록 대중을 상대로 가시돌린 독설이나 퍼붓고 비루한 측근에만 더 의존하는 행태는 반감만 키울 뿐이다.

이런 정치 상황은 노동자 투쟁에도 유리한 조건이 된다. 9월 23일에 금웅노조 하루 파업은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의 파업으로 바통을 넘겼다. 9월 29일, 10월 1일 집회는 수만 명이 결집했다. 오랜만에 하루 전면파업을 한 현대차지부도 사측에 수조 원의 타격을 주며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 투쟁이 익숙치 않은 노조부터 전통적인 민주노총의 오른팔 노조까지 모두 파업으로 정부와 맞서는 건 시사적이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선 저항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더 단호하게 투쟁하면 전진할 수 있다.



소시적(1979년) 최순실(좌)과 박근혜.

미르·K스포츠 재단 건립 비리, 노동자 임금 투쟁 비난 자격 없다

오랫동안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국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폭로되며 박근혜의 텃밭까지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은 박정희 정권에서 박근혜가 퍼스트레이디 구실을 대신할 때, 측근으로 알려진 최태민의 딸이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그때부터 40년간 측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얼마 전까지 그녀의 남편이던 정운회가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점과 그 딸이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부터 제공받은 엄청난 특혜를 보면, 최순실이 박근혜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짐작이 간다. 오죽하면 실제 권력 서열은 최순실이 1위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러나 최순실 측근이 이사장인 ‘틀보잡’ 재단이 재벌들에게서 순식간에 8백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낸 일이

단순히 최순실 개인의 비리겠는가? 창조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한 이 재단들의 수백억 모금 과정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안종범이 가담하고, 모금액 규모가 재계 서열대로이며, 재단들의 위치도 공공롭게 모두 박근혜의 삼성동 사저와 1킬로미터 근방이라는 점은 이 ‘불법 정치자금 게이트’의 몸통을 짐작케 한다.

그래서 박근혜가 아군인 (조선일보)와 유혈 남자한 전투를 치러가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를 보호하고,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 이석수를 내친 것은 모두 의혹 추적이 이 재단의 모금 문제로 모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경련 기관지나 다름 바 없는 <한국경제> 김정호 수석노설위원이 11개월 전에 쓴 칼럼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

다.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답은 ‘내라니까 냈다’였다. 누가 내라고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다 아시면서’라는 꼬리 없는 답이 돌아왔다.”(<한국경제> 2015.11.19. “이런데도 법인세를 올리자고?”)

이런 강제 모금에는 기업주들을 검찰, 국세청 등이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동법 계약 등 강성 친기업 행보를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혐오 성격도 있었을 것이다. 법인세 인상을 하지 말라는 <한국경제> 칼럼의 제목이야말로 돈을 낸 기업주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박근혜와 재벌들의 유착물인 권력형 부패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그들이 노동계급 공동의 적임을 보여 줄 뿐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의 증거인멸 시도

박근혜는 이번 국감이 싫었을 것이다. 야당들에게 정부의 실정들을 말로라도 공개적으로 따져 물을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사드 현안이 있는 국방위원회의 국감 진행 문제를 놓고 친박 강경파들이 특히 민감했던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9월 30일에는 우병우 감찰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조사(정식 감찰을 위한 사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났다. 박근혜는 9월 23일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27일에 (감찰관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인원들까지 모두 해임했다. 이로써 이들이 기관

증인으로 국감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차라리 9월 23일 이전에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해임했다면, 일반 증인으로라도 부르는 게 가능했다.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국감 증인 출석을 계획적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같은 때 전경련도 미르·K스포츠 재단은 청와대 측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것이고 돈도 자기들이 알아서 걷은 것이라며 ‘해제’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두 재단과 돈을 낸 대기업들이 일제히 관련 서류를 파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야말로는 이유로 나머지 인원들까지 모두 해임했다. 이로써 이들이 기관

도이체뱅크 위기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것인가?

최근 벌어진 도이체뱅크 위기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 시작됐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는 2005~07년에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부실 판매했고, 이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조사하던 미국 법무부는 최근 도이체뱅크에 벌금 1백40억 달러(15조 4천억원)를 부과했다.

그런데 도이체뱅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한 총당금이 62억 달러밖에 안 돼 벌금을 납부하면 자기자본이 감소할 형편이다. 자기자본 감소는 이자 비용을 높여 부도 위험을 키운다. 그래서 헤지펀드 10여 곳이 도이체뱅크에 맡겨 둔 자금을 인출했고, 도이체뱅크의 주가는 지난해 말 24달러에서 최근에 절반 이하인 11달러로 곤두박질쳤다.

2008년 9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에 빠뜨린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상기시킨 도이체뱅크 위기로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고, 일명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VIX) 지수도 급등했다.

9월 30일 미국 법무부와 도이체뱅크가 벌금을 54억 달러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도이체뱅크 부도 위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일은 어쩌면 더 큰 위기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금융계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투자은행

역사가 1백46년이나 된 도이체뱅크는 전통적으로 독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덩치를 키워 온 상업은행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해 채권 발행과 파생상품 거래 수수료 수익에 집중해 돈을



벌었다. 도이체뱅크는 2008년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아 계속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미 올해 초부터 도이체뱅크 위기설이 나돌았다. 2015년에 68억 유로(8조 4천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도이체뱅크가 ‘코코보드’(조건부 후순위 전환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 바 있다. 도이체뱅크는 6월에 실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욱이 리보금리(런던의 은행간 금리, 보통 국제 단기 기준금리로 쓰인다)와 환율을 조작한 추문으로 신뢰까지 잃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도이체뱅크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회사로 평가했다.

물론 도이체뱅크의 유동성 자산이 2천4백억 유로이므로, 헤지펀드 자금 3백30억 유로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또, 도이체뱅크는 보유 자산 1조 8천억 유로를 담보로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당장 도이체뱅크 부도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이체뱅크가 태풍의 핵이 될 가능성도 꽤 된다. 도이체뱅크가 관리하는 파생상품의 규모는 46조 유로(5경 5천7백조 원)이나 되고, 그중 4백10억 달러어치는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도이체뱅크의 총당금은 62억 달러뿐이고, 그중 최소 54억 달러는 벌금으로 내야 한다. 파생상품에서 조금만 손실이 나도 도이체뱅크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부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도이체뱅크의 부실은 다른 유럽 은행들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도이체뱅크뿐 아니라 유로존 금융권 전반이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

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2011~12년 유로존 국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유럽중앙은행은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한 낮췄다. 그러나 낮은 이율을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자, 유로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이자율 마진마저 매우 낮아져 수익률이 곤두박질쳤다.

프랑스와 벨기에 합작은행인 텍시아, 이탈리아 최대 은행 우니크레디트, 이탈리아 2위 은행인 인텔사 산파울로 등 대형 유럽 은행들이 여전히 취약하다.

불황

물론 유로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위기는 유로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불황이라는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 달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경제예측’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무역, 투자, 생산성 등의

성장이 저조해 세계경제(인도와 중국을 포함)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2017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3퍼센트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감소했다. 한진해운 같은 해운사와 그 배를 만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세계 교역량이 정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래로 투자도 급속히 줄어들었다. 최근 맥킨지는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중국은 2008년에 견줘 투자를 79퍼센트나 증대하면서 전 세계 투자를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연간 투자 증가율은 2008~15년에 10.4퍼센트에서 2015~30년에 4.5퍼센트로 하락할 전망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 위기의 세 번째 국면에 진입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를 언급했다. 신흥국 기업 부채는 2008년 이래로 지금까지 GDP의 57퍼센트에서 1백4퍼센트로 증대했다. 여기에 올해 말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다시 인상한다면 일부 개도국은 금리와 환율이 폭등해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크레딧스위스(CS), 유비에스(UBS), RBS(스코틀랜드 소재 은행), 바클레이즈,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다른 유럽 대형 은행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세계경제가 또 다른 침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노동자연대 지회 공개모임

서울 서부2지회 공개모임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
연사: 강동훈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
벌개혁론 비판》 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10월 5일(수) 오후 8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4층 78번 모임방
참가비: 3,000원
참가 문의: 010-6717-1968

서울 서부1지회 공개모임
재벌개혁론 어떻게 봐야 하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강동훈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
벌개혁론 비판》 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10월 6일(목) 오후 8시
장소: 신촌 엘피스카페 2층 로뎀방
참가비: 2,500원 (장소 대여료, 카페에서 음료
구입시 500원)
참가 문의: 010-7432-2858 (문자 가능)

서울 북부지회 공개모임
오늘날의 제국주의
연사: 김광일 노동자연대 활동가
일시: 10월 13일(목) 오후 8시
장소: 전교조 서울초등중부성북지회 사무실
참가비: 2,000원 (장소 대여료)
참가 문의: 010-8862-8377 (문자도 환영)

서울 남부지회 공개모임
여성억압의 기원
— 여성은 언제나 억압받았는가?
연사: 김동욱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일시: 10월 14일(금) 오후 8시
장소: 강남역 모임공간 망고
참가비: 4,000원 (장소 대여료)
참가 문의: 010-8262-3245

서울 중부지회 공개모임
**핵발전, 지구온난화 ... 마르크스주의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나?**
연사: 장호중 《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10월 14일(금) 오후 8시
장소: 대학로 토즈 5층 p7번 방
참가비: 4,000원 (장소 대여료)
참가 문의: 010-5061-4571 (문자 가능)

강원충북 지회 공개모임
누가, 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가?
연사: 성지현 노동자연대 활동가
일시: 10월 11일(화) 오후 7시
장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소회의실
참가 문의: 010-3328-9853

노동운동의 주요 쟁점을 다룬 노동자연대의 소책자를 추천합니다

구입문의
전화 02-2271-2395
이메일 mail@workersolidarity.org
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민주노총 정치 방침과
진보·좌파 정치의 전망**
김인식, 최일봉 지음, 148쪽 4,000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
강동훈 지음, 96쪽 3,500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136쪽 4,000원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김하영 지음, 188쪽 5,000원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 것인가**
강동훈, 박설 지음, 68쪽 2,500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
강동훈 지음, 96쪽 3,500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136쪽 4,000원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 발표

과잉 생산 위기가 짓누르고 있는 한국 경제

강동훈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가 채 끝나지도 않았고, 조선업 구조조정도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9월 30일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석유화학은 베인앤컴퍼니, 철강은 보스톤컨설팅그룹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기반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외국계 컨설팅 업체들이 정부의 영향력 하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아직까지는 버틸 만하지만, 앞으로 위협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잉 공급 부문은 설비 감축·매각 등으로 줄이고, 고부가가치 부문을 지원해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해운·조선과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도 전 세계적인 과잉 공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다.

2015년 전 세계 철강 생산 능력은 23억 8천만 톤인데 반해 철강 수요는 16억 톤 정도로, 철강 공급 과잉 규모는 7억 5천만 톤이나 된다. 앞으로 몇 년간은 전 세계 철강 수요가 거의 제자리걸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철강 설비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인 과잉 공급을 이끌었다.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은 2005년 4억 4천만 톤에서 2015년 11억 5천만 톤으로 급증했지만, 중국의 철강 수요는 3억 6천만 톤에서 7억 톤 정도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철강 공급 능력 과잉이 4억 5천만 톤이나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억~1억 5천만 톤의 철강 생산 설비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반발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철강 수출은 특히 최근 2~3년간 급증했다. 2013년에 6천만 톤 수준이던 것이 2015년에는 1억 1천2백만 톤(한국 철강 생산량의 약 1.5배)으로 늘었고, 이 중 한국으로 1천3백73만 톤(한국 철강 소비량의 4분의 1)이 들어왔다. EU·북미·동남아시아 등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철강 제품은 치열한 경쟁 중이다.

석유화학 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자급률이 높아졌다. 중국은 조만간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중동 석유화학 기업들도 저렴한 원료 가격이라는 우위를 이용해 설비를 크게 늘리며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북미에서도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증산하고 있다.

철강 구조조정 첫째 대상으로 언급되는 부문이 후판이다. 후판은 조선·해양플랜트에 들어가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철강

조선업이 호황이던 2000년대 중후반에는 후판이 공급 부족 상태였다. 그래서 후판을 생산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2007~13년에 후판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렸다. 2007년 3사 합산 후판 생산 능력이 6백여 톤이었는데 2015년에는 1천3백만 톤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침체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됐다.

현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각각 4곳, 2곳, 1곳의 후판 공장에서 각각 연간 7백79만 톤, 3백50만 톤, 1백5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경기가 회복되기 쉽지 않라며, 이중 4백만~5백만 톤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후판 공장 3~4곳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철강산업의 강관 분야도 중소기업자들이 난립해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관은 속이 비어 있는 지름 4~6미터짜리 파이프로, 얼마 전까지 북미 지역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수요 확대를 기대하면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가 하락으로 셰일가스 투자가 줄어들고, 미국이 반덤핑관세 같은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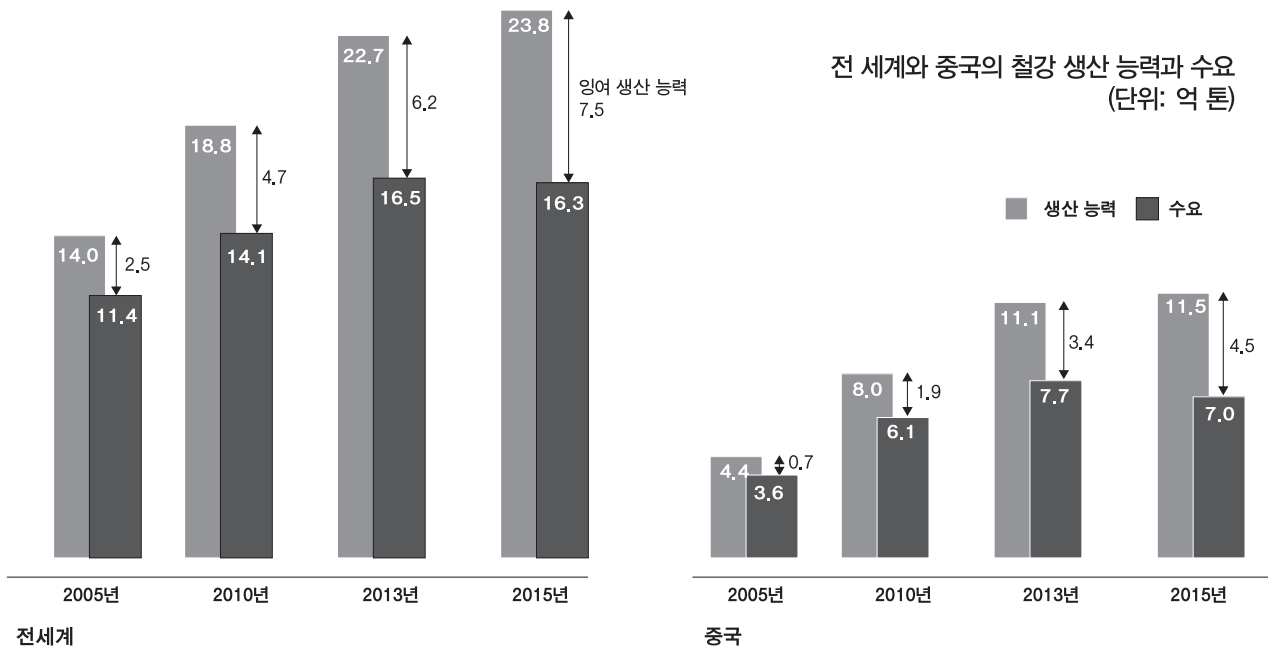
정부는 철근 분야도 중장기적으로 설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철근이 주로 사용되는 주택 건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업체들의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지만, 향후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질 공산이 크고, 중국산 철근 수입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감축·매각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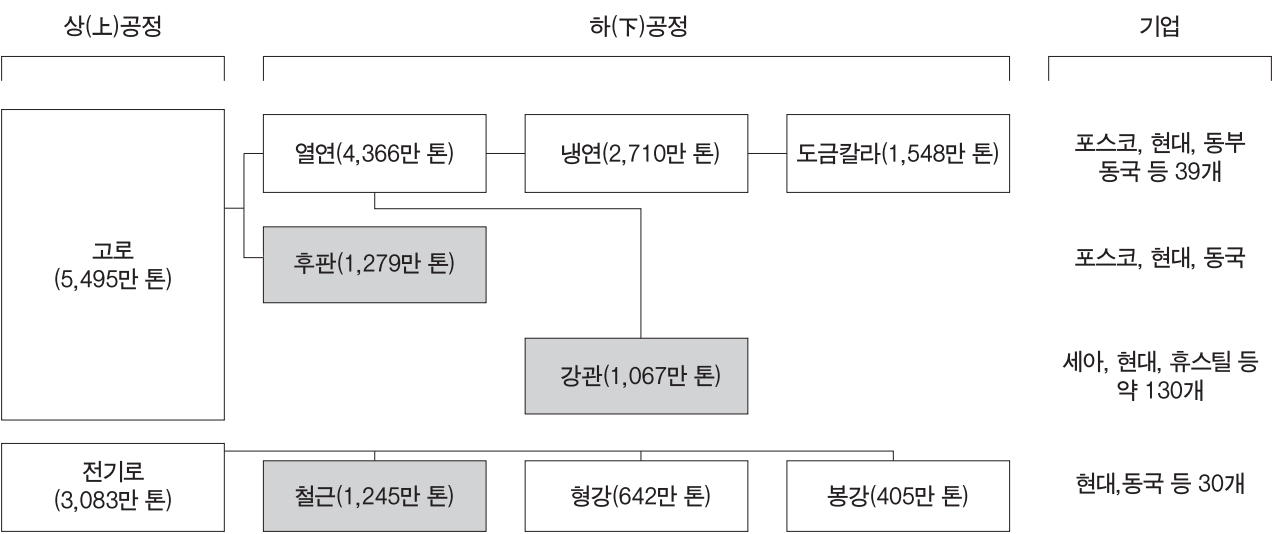
후판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낮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동국제강은 지난해에 이미 공장 한 곳을 정리했기 때문에 남은 1곳마저 감축하라고 한다면, 아예 후판 사업을 접으라는 뜻이 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공장 감축에 쉽게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강관과 철근도 자발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강관 사업은 1백여 개 넘는 중견·중소업체들이 영업중이고, 철근 사업도 중견·중소업체들이 많다. 이들은 강관이나 철근 하나만 만드는 회사들이 경우가 많아,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 특히 철근 사업은 현재 수익성도 나쁘지 않아 정부가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다.

철강 업체들은 “지금 공장이 문을 닫으면 중국 등 해외 철강 업체에 시장을 고스란히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설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5년 한국 철강 생산 능력 (* 는 과잉생산 부문)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은 석유화학 품목은 페트병 원료인 테레프탈산(TPA), 장난감 소재인 폴리스티렌(PS),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BR, SBR 등), 파이프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 등 4가지다. TPA와 PS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생산량을 감축하고, 합성고무와 PVC는 생산 능력을 더는 늘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특히 연간 생산 능력이 5백85만 톤에 이르는 TPA가 대표적인 과잉 업종으로 꼽혔다. TPA는 최근 연간 생산량을 4백70만 톤 수준으로 줄였지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1백만 톤 정도를 추가로 감산해야 한다.

국내 TPA 생산업체는 한화종합화학, 삼남석유화학, 태광산업, 롯데케미칼, 효성 등 5곳이다. 연간 생산 능력은 한화 2백만 톤, 삼남 1백80만 톤, 태광 1백만 톤, 롯데 60만 톤, 효성 42만 톤이다. 정부는 인수·합병(M&A)으로 업체들을 3~4곳으로 재편하길 원하는 듯하다.

하지만 업체들이 유가 하락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 TPA 공장을 매물로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다.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은 롯데케미칼과 효성에게 감산을 권유했지만, 이들은 생산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배자들의 분열과 노동자 투쟁

해운·조선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산업에서도 2008~0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압력이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을 궁지에 몰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성장 둔화뿐 아니라 최근 도이체뱅크의 파산 위협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난 전 세계 금융의 불안정성과 취약함은 한국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지배자들 내의 이견과 정부의 레임덕 때문에 정부 주도의 합병·폐업 등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철강·석유화학 기업주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앞서 봤듯이 자신들의 설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발하고 있다.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는 조선업 구조조정 보고서는 이번에 제출되지도 못해

10월로 미뤄졌다. 기업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조선업 중간 보고서를 여러 차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대형 3사에 보고했으나, 그때마다 업체들이 반발해 보고서조차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번에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철강업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40퍼센트에 가까워, 조선업(67.8퍼센트)과 함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줄여 주려 하고 있다.

지배자들이 분열한 상황에서 현재 벌어지는 노동 개악에 맞선 공공부문 파업과 현대차 등의 임금 인상 투쟁이 전진한다면,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데 더 유리해질 것이다.

전 세계 에틸렌 생산 능력(단위: 천 톤)

구분	2012		2015	
세계	147,287	100%	160,301	100%
미국	26,981	18.1%	28,471	17.8%
중국	16,510	11.1%	21,323	13.3%
사우디	15,585	10.4%	16,165	10.1%
한국	8,350	5.6%	8,640	5.4%
일본	7,605	5.1%	7,058	4.4%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클린턴과 트럼프 둘 다 미국 권력 기구를 대변한다

김준효

11월 8일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금,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근소한 차로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의 영향이 크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는 민주·공화 양당의 역대 대선 후보 중 둘째로 적은 지지를 얻고 있다(역대 최저는 트럼프다).

양당 대선 후보의 지지가 이토록 낮은 상황의 근저에는 경제 위기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커다란 환멸이 깔려 있다.

오늘날 미국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은 몹시 열악하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50년 동안 고작 1.5달러 올랐을 뿐이며(시급 19.2달러→20.7달러), 그나마도 뉴욕 시가 추산한 4인 가족 적정 생계비(32달러)의 60퍼센트 수준이다.

반면 양극화는 세계 최악 수준이다. 상위층의 소득 비중은 불황기에도 꾸준히 늘어, 2015년 전체 국민소득의 22.1퍼센트가 상위 5퍼센트 가구에 집중됐다. OECD의 임금 불평등 통계 지표(하위 10퍼센트의 임금 대비 상위 10퍼센트의 임금)를 봐도, 미국은 5.03배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불평등하다.

2008년 오바마는,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노동자 민중의 변화 열원에 올라타 집권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집권 8년 동안 생색내기 이상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빈곤과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서민들 사이에는 지배층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크다. 미국 유권자의 72퍼센트가 기성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워싱턴포스트>)

힐러리 클린턴은 스스로 그 지위에 올랐지만, 기득권층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힐러리는 남편 빌 클린턴의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월가 금융자본과 대기업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공격적 자유시장 정책을 한결같이 옹호했다. 그 시절 힐러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거들었다. 또,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지금 힐러리는 당선하면 경제 정책을 NAFTA를 체결한 빌 클린턴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힐러리는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의 사외이사 경력도 있다.

힐러리는 복지 공격에도 열심이었다. 이미 빌 클린턴 정부 시절 힐러리는 빈민 가구 지원금을 삭감하는 공공 복지 개악을 적극 지원했으며, 흑인들의 처지를 크게 공격하는 폭력범죄통제지원법을 옹호하며 흑인들을 “심각한 약탈자”라 비하한 것으로도 악명 높았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힐러리는 공세적 제국주의자다. 힐러리는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적극 지지했다.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는 리비아와 시리아



두 악마의 악수 9월 26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선 트럼프와 힐러리.

에 대한 군사 개입에 앞장섰으며,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증파하는 데 큰 책임이 있다. 또 힐러리는 라틴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일어난 우파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서도 힐러리는 공세적 대외 정책을 앞장서 추진했다. 힐러리는 “아시아의 성장과 역동성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므로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에서 동맹을 규합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9월 26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힐러리는 ‘해외 정치에(동맹들과 함께)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자신이 앞장섰던) 오바마 정부의 대외 정책을 옹호했다.

이처럼 힐러리는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한 욕망”(<뉴욕타임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삶을 파괴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전략을 주도한다. 그래서 힐러리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TPP 지지를 철회하는 듯한 말을 흘리고, 후안무치하게도 자신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적 없는 척해

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힐러리를 “믿을 수 있다”는 유권자가 전체의 20퍼센트를 밀도는 것은 이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

아웃사이더?

제도권 정치 전반에 대한 환멸을 배경으로,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며 부상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주류 정치인들이 월가에 매수됐다고 맹비난하며, 자신은 부자라서 매수되지 않을 것이라 으스댔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주민·무슬림·유색인종·여성 등에 대한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 공화당 내 극우 정치 조직인 ‘티파티’를 지지하던 우파적 백인들 상당수가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트럼프의 경선 승리를 막지도 못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대졸 미만 학력의 백인층에서 힐러리에 크게 앞서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파괴한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트럼프가 문제 삼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는 일부 경합주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다. 이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계속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주로 멕시코 계) 이주노동자들과 저임금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절망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본 이동 규제, 이주민 악마화,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같은 우파 포퓰리즘적 선동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들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 백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커질수록, 미국 노동자들이 ‘국익’에 매달릴수록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쉽게 저임금과 실업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억만장자인 트럼프 역시 기득권층의 일부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맞춰 자신의 연사를 조금씩 손질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의 ‘고립주의’적 주장에 대한 지배자들의 불만을 무마

하려 애쓴다. 9월 26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가 아랍 지역에 충분히 공세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나토(NATO)와 함께 중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주류의 반발을 감안해 기존의 ‘나토 무용론’을 뒤집은 것이다.

전에도 트럼프는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찬동했던 자다. 트럼프는(9월 26일 토론 때는 말을 바꿨지만) 이라크 침공을 처음부터 적극 지지했고, 대선에 뛰어들면서는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중동에 지상군 3만 명을 파병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아이시스를 상대로 전술 핵무기도 쓸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 등으로 군사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도 힐러리 못지 않게 공세적인 제국주의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슬로건 역시,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지배계급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샌더스의 힐러리 지지는 잘못된 선택

미국의 많은 진보 운동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될까 봐 우려하며 대선에서 힐러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정치 혁명”이라는 슬로건 하에 힐러리에 맞서 경선을 치렀던 버니 샌더스도 그중 하나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경선 기간에 대기업과 월가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힐러리 클린턴을 ‘1퍼센트의 대변자’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주류가 총력을 기울여 샌더스를 방해하고 공격했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샌더스를 지지해 몰려들었으며, 일부 노동조합들도 샌더

스를 지지했다. 1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샌더스에 투표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경선에서 패배한 후 힐러리 지지를 선언했다. 수십 년 동안 좌파를 민주당 투표 부대로 동원하는 데 쓰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하면 전례 없는 우경화가 몰아칠 것’이라는 협박과 공포 조장 논리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샌더스가 “항의성 투표를 할 때가 아니”라며 그 자신이 경선 기간 동안 격렬하게 비판한 힐러리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그 주위로 몰려들었던 변화의 열망은 기세가 꺾였다. 소수는

민주당에 남았지만, 다수는 실망하면서 샌더스를 떠났다.

트럼프의 약진이 미국 주류 정치의 우경화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힐러리도 버니 샌더스와 치른 격렬한 경선 때문에 가끔 왼쪽 연사를 하지만 우파적으로 처신한다.

두 제국주의자 중 누가 집권하든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더한층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차악론에 혹해 힐러리를 지지해서는 샌더스의 “정치 혁명”을 지지했던 진보 대중을 위한 변화를 쟁취할 수 없다. 그보다는, 양대 친자본 정당에



사진 출처: Gage Skidmore (힐러리)

힐러리 지지로 색바랜 샌더스의 “정치 혁명”.

맞선 좌파적 대안을 거리와 작업장에서 참을성 있게 건설해야 한다. 힐러리와 트럼프 두 기득권 인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노동자 대중은 백악관에 맞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지금, 임금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왜 임금 문제가 중요한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안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줄이는 게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뿐이므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자기 부분 또는 몫(임금과 이윤)을 끌어내야 할 유일한 밑천'이라고 강조했다(『임금, 가격, 이윤』). 그래서 이 둘은 "한 쪽이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은 적게 받게 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마르크스의 임금론을 받아들인다는 사람들도 흔히,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적당한 생계비를 계산하는 데 곱씹는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노동자가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가 노동해서 창조한 가치는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창조한 가치 가운데 임금을 뺀 나머지를 가져간다. 이것이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다. 이윤의 원천은 자본의 노동 착취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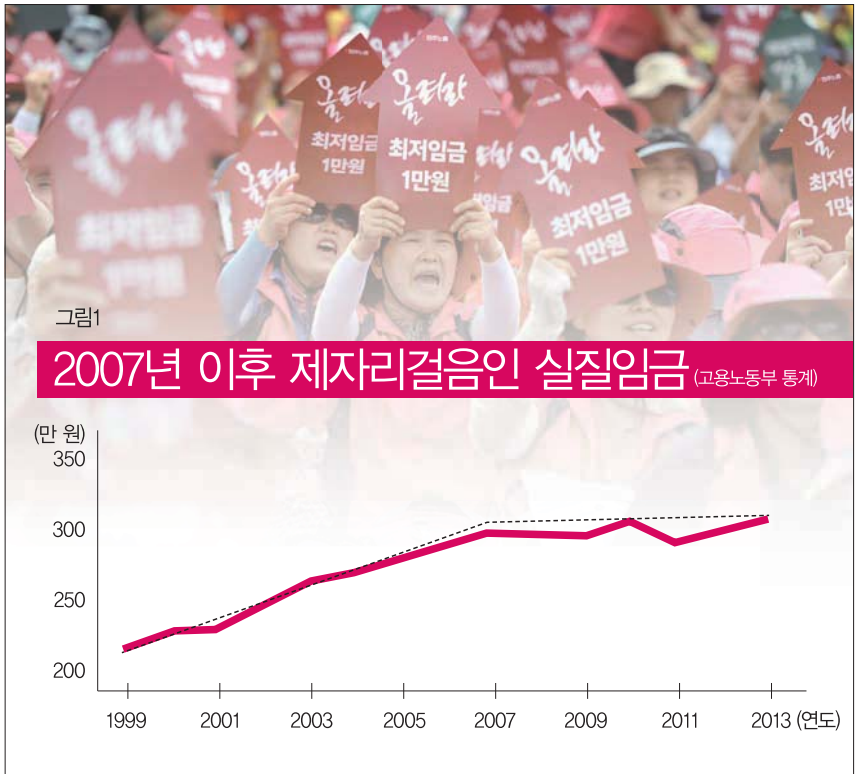
그런데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노동 착취를 증대하려 하고, 노동자들은 되도록 덜 빼앗겨야 참을 만한 수준으로 살 수 있다. 지금 정부와 기업주들이 하려는 일은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가려는 것, 즉 착취를 증

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미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그리고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 이윤율을 일시 만회할 수 있었다. 사실, 한국의 지배자들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불만이다. 노동운동이 1987년 이후 꽤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 개선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을 보면 얘기가 좀 다르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봐도 실질임금은 2007년 2백90만 원대로 진입하고는 7년 이상 변화가 없다. 1970년대 50만 원가량에서 1980년대 1백만 원대를 돌파한 뒤 1990년대 후반 2백만 원대로 증가했는데, 얼마

전부터 실질임금 상승이 멈춰선 것이다(그림1).

정부와 기업주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다. 임금을 아예 삭감하려 한다. 그래서 연공급제를 없애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시도하는 다른 공격도 결국은 임금 문제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그것이다. 이것은 기만적인 용어다. 정확하게는 "노동시간 유연화"나 "변형근무제"라고 해야 한다. 일이 없을 땐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질임금은 2007년 2백90만 원대로 진입하고는 7년 이상 변화가 없다. 1970년대 50만 원가량에서 1980년대 1백만 원대를 돌파한 뒤 1990년대 후반 2백만 원대로 증가했는데, 얼마



정부의 공격 논리와 노동운동 온건파의 약점

위에서 봤듯이,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핵심적으로 공격하려 한다. 그러므로 지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지키려면 임금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만만찮은 난제들이 있다. 하나는 정부와 고용주들이 거짓 말과 이에 기초한 이간질 전술들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역경게도 그들은 마치 조건이 나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싶는데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어렵다는 식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해 온 당사자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평등"과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며 노동자들을 겨누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문제를 들먹이면서,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과 보호"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독창적 논리가 전혀 아니다. 세계 곳곳의 지배자들이

임금 억제 정책을 펼 때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팬참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다른 하나는 진보·좌파 진영 안에, 정부와는 달리 선의에서이겠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이 '임금에 연연하는 투쟁'을 하면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만 벌어질 뿐이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지키려고 하면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도 한다. 연공급제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인데, 정규직이나 해당된다는 것이다.

가령 박태주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협회의회 위원장은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매일노동뉴스,

2014)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현대차·기아차 노조는) 임금투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이다!" 고용도 못 지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이다. 〈한겨레〉같은 민중주의 신문은 이런 주장을 받기며 "성공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이 '임금에 연연하는 투쟁'을 하면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만 벌어질 뿐이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지키려고 하면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도 한다. 연공급제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인데, 정규직이나 해당된다는 것이다.

가령 박태주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협회의회 위원장은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매일노동뉴스,



임금 격차의 진실 (1) 점점 벌어지는 경영자 봉급(연봉)과 노동자 봉급(임금)

정부와 고용주들은 저임금층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리하는 순간 패배하는 것이다!" 고용도 못 지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이다. 〈한겨레〉같은 민중주의 신문은 이런 주장을 받기며 "성공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조직 노동자들이 '임금에 연연하는 투쟁'을 하면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만 벌어질 뿐이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지키려고 하면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도 한다. 연공급제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인데, 정규직이나 해당된다는 것이다.

간에 급격히 증가했다.

최상위층의 임금 소득이 급증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7년간 제자리를 면치 못했다. 조직 노동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는 상위 10퍼센트에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들을 포함시켜 평균치를 올린 다음, 마치 이것이 대공장·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임금인 것인 양 거짓말한다.

여기에 경영자들의 배당 소득까지 더하면 그들이 기업으로부터 챙겨가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가령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2011~15년 배당으로 수천억 원을 받았다. 이진희(삼성그룹)가 6천8백10억 원, 정몽구(현대자동차)가 3천63억 원, 최태원(SK그룹)이 1천6백4억 원, 구본무(LG 그룹)가 1천22억 원, 정몽준(현대중공업)이 6백56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최고경영자들의 소득이 능력이나 성

공에서 나온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2013년 연봉을 3백1억 원이나 받았는데, 2013년 내내 그는 횡령죄로 구속 수감돼 있었다. 삼성그룹 회장 이진희가 2015년 받은 배당금은 무려 1천7백72억 원이었는데, 그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서 받은 것이다(그림3).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은 우리의 시야를 노동자 계급 내 차이에만 머물게 하려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심대한 경제 위기를 두 차례 겪으면서 소득 불평등은 더욱 증대했고, 노동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에 더 극심하게 벌어져 왔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재원을 포함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재원을 자본가들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 내에

서의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말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2) 격차 증대는 노조 효과가 아니라 무노조 효과

임금 격차 문제에서 우리가 대결해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노동조합이 임금 격차를 벌리는 구실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임금이 더 높고 노동조건도 더 좋다는 게 참말이다. 그러나 한 건설한 연구 결과를 보면(강승복·박철성, '임금분포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 이런 효과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사업장 내에서나 사업장 간에서나 임금 격차가 더 적었다. 1998년 이후 임금 격차가 증대하는 것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부분에서 임금 격차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노동조합이 강할수록, 조직노동 부문이 잘 싸울수록 격차가 증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하고 무기력할수록 격

차가 더 벌어지는 바.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많은 사람들이 더는 이런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격차 증대에 기여한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한 건설한 연구 결과를 보면(강승복·박철성, '임금분포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 이런 효과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사업장 내에서나 사업장 간에서나 임금 격차가 더 적었다. 1998년 이후 임금 격차가 증대하는 것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부분에서 임금 격차가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노동조합이 강할수록, 조직노동 부문이 잘 싸울수록 격차가 증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없거나 약하고 무기력할수록 격

차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면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해 줄 것처럼 말하며 노동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낮았던 것만 봐도 이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노조 효과'라는 것에는 이런 수치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투쟁의 동역학이 있다. 그것은 한 부문이 투쟁을 통해 조직을 건설하고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은 서로 고무하고 연대하며 조건을 개선해 온 것이다.

한 부문이 싸워 조건을 개선하면 나머지 부문과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정책적 관점일 뿐이다. 동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스냅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처럼 말이다.

격차 문제와 대안 논쟁

물론 상이한 노동자 부문간 임금 격차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자본가들은 상이한 노동자 부문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여성은 남성의 63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14년 연속 OECD 1위다. 이주 노동자들의 소득은 내국인 노동자의 6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격차 역시 OECD 1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여전히 매우 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좀 더 나은 처지의 노동자들은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하후상박의 원리를 적용한 임금요구안을 발표해 왔다. 하후상박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되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 조건을 더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하고 필요한 원칙이다.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보면 투쟁이 고양될 때 흔히 노동자들은 처지가 더 나쁜 부문의 임금을 더 많이 올리곤 했다. 문제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관철할 힘인데, 민주노총 스스로 평가하듯이 요구안을 제출하는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통계를 봐도 남성 노동자의 경우 내부노동시장에서 직업 경력을 시작했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20~30대에 가진 직업을 4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4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에서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원청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과 한판이 돼 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한 결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착취당하는 처지다. 대기업의 생산성은 하청 기업보다 훨씬 높다. 대기업 생산성이 100이면 하청 기업은 34.5이다(2013년). 이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착취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해도 뺏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체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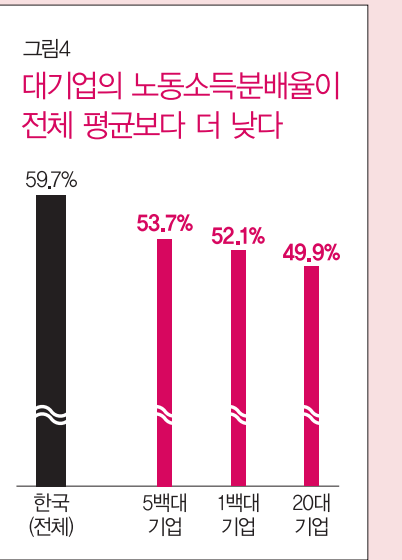
그런데 연대 투쟁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견해가 노

동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노동시장 분절 때문에 노동자들은 연대할 수 없는가?

더 나은 처지의 노동자 부문과 열악한 부문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른바 내부노동시장에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부문과 외부노동시장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부문 사이에는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골이나 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말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조차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듯 내부노동시장에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부문과 외부노동시장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부문 사이에는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골이나 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에서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원청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과 한판이 돼 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한 결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착취당하는 처지다. 대기업의 생산성은 하청 기업보다 훨씬 높다. 대기업 생산성이 100이면 하청 기업은 34.5이다(2013년). 이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착취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해도 뺏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체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4).



저임금 노동자층의 열악한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압박한다는 점을 봐도, 비정규직의 조건 개선이 정규직에도 좋은 것이다. 설사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비정규직을 사용자층 공격의 완충재로 여기더라도 그것은 허위식이나 착각이지, 객관적 진실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형이나 동생, 아내이거나 아들 딸이라는 점을 봐도 두 집안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보는 게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일원을 완충장치로 삼아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누가 원하겠는가?

무와 같은 사실들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이해관계가 결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고용한 자본가들로부터 착취당하는 처지이고, 여기서 비롯한 적대 관계 때문에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는 동질감 또는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 처지와 조건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부문을 넘어 연대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10면으로 이어짐



노동자 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 9면에서 이어짐

(2) 조직 노동자들은 임금 요구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노동자들이 연대하려면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로 투쟁하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운동 안에 상당히 퍼져 있다.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쟁취하면 노동자들 간의 격차만 벌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같은 요구로 투쟁해야지,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로 싸우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다.

물론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같은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합시켜야지, 서로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조직 노동자의 요구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은 정부가 임금 공격을 하는 지금, 불필요하게 수세적이고 사실상 무기력한 입장이다.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로 싸우기를 자제해 정부가 관찰시키려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이 도입된다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세력균형은 자본 쪽으로 더욱 기울어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될 게 뻔하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밝혔듯이, 정규직 보호 조항을 약화시킨 나라들에서 비정규직의 처지는 하나같이 더 나빠졌다.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는 조건 하에서는 노동자들은 어떤 고귀한 이념을 위해서보다는 자기 조건을 지키는 투쟁에 훨씬 자주 내물리게 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의식이 변하고 연대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다. 투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종종 부문을 넘어 연대한다. 자기 요구를 가지고 싸움에 나서지 않는 노동자들이 먼저 다른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해 투쟁에 나서기는 경기 침체 하에서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 학자나 노조 지도자들이 ‘적절한’ 요구를 선정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부문의 투쟁이 노동자 간 격차만 늘린다는 생각이 유행하다 보니, 이제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현대차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나 조건 개선 투쟁은 나머지 부품사 노동자들과 격차만 늘렸다는 식이다. 그러나 잘 조직된 부문의 투쟁과 성과가 나머지를 고무해 투쟁을 확대하도록 해야지, 그 역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지불 능력을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써야지 그 기업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큰둥하게 보기도 한다. 그러나 투쟁의 동역학을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기 고용주의 이윤을 압박해 그들을 궁지에 몰지 않고는, 개별 기업이 자기 회사 노동자 임금을 위해서든 ‘사회적 임금’을 위해서든 재원을 내놓도록 그들을 강제할 수 없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력에 의지하지 않고 대기업 고용주들을 상층 협상 테이블로 불러 내어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노동자들 내의 나누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노동자 내부의 임금 평등 문제를 중시한 나머지, 전체 노동자 계급의 몫을 늘리는 것보다 노동자 내의 나누기를 대안으로 보는 주장도 많다.

일부 노동자 임금을 낮추고 일부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식의 ‘연대임금’이나 ‘직무급’ 대안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 새삼 주목을 받은 ‘연대기금’도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인상액의 10퍼센트를 노동자들이 내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회사가 내, 이 돈(66억 원)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쓰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도 지난해 연말 ‘나눔과 연대 기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연대기금은 실질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기에는 푼돈 수준이다. 기업은 푼돈 수준을 내놓고 생색내기를 할 수 있다. 진정한 차별 폐지는 거부하면서 말이다. 한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실질적인 액수가

되려면 그것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이런 방식은 비정규직 조건 악화에 정규직이 책임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문제점도 있다. 노사정위가 SK 하이닉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띄웠던 이유다.

물론 불평등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선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연대기금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인지 따져 봐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을 통해 지불 능력이 있는 자기 기업주를 압박해 적잖은 양보를 얻어낼 힘이 있다.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만 얼마인가? 그러나 이런 힘 있는 노조가 제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연대를 중도 포기한 다음 연대기금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비정규직 연대와 조건 개선을 위한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 투사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마르크스는 임금 투쟁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고 보지 않았고, 임금 수준은 결국 주로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에 의해 정해진다고 봤다. 마르크스는 임금 투쟁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봤지만, 다른 점에도 주목했다. 그런 투쟁으로 훈련된 노동자들만이 더 광범한 운동과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비록 어느 한 시점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가 증대하는 듯하고 모순된 결과가 빚어지는 듯할지라도, 노동자들의 부문 투쟁을 무시하고 그것이 해롭고 무질서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엘리트주의적 관점일 뿐이다. 어떤 폭목한 학자들의 정책 대안도, 자애로운 정치인의 개혁 입법도, 노조 지도자들의 협상 수완도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만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투쟁하면 저절로 연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속 투사들과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투사들과 사회주의 노동자들은 잘 조직된 부문의 임금과 조건 방어에 사용되는 힘이 전체 투쟁을 위해서도 사용되도록 노동조합 속에서 늘 분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기주의로 여기며 외면한다면,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를 뜻하지 않게 돕는 꼴이 될 수 있다. 도덕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가 행동지침이어야 한다.

첫째, 잘 조직된 부문의 임금과 조건 방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투쟁을 이기주의로 보며 그걸 위축시키는 주장으로부터 그 투쟁을 옹호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 임금피크

제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이 전진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에도 중요하다. 이 투쟁이 잘 되면, 다른 노동자 부문에 자신감을 주고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둘째, 잘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연대를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잘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들이 개별 기업 차원의 임단협뿐 아니라 정치적 투쟁에도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 사드 배치, 노동자·민중운동 탄압 등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자 운동은 이런 문제들에 맞서 싸움으로써 “민중의 호민관”이 돼야 한다.



임금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생활 수준을 지키고, 투쟁 과정에서 의식과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다.

흔히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 같은 지향성에 부담을 느끼고 개별 기업이나 부문의 경제적 투쟁으로 투쟁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 또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부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며 ‘정치적’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정치’는 온건하기 이를 데 없는 개혁정당들에 기대거나 선거를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다 진정한 대안이 못 된다. 이럴 때 노동조합 투사들과 사회주

의자들이 그것이 왜 대안이 아닌지 논쟁을 벌이며 노동자들을 설득하면, 작업장 내의 세력균형을 바꿔 투쟁을 전진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러려면 투사들과 사회주의 노동자들은 미리 잘 조직돼 있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가 몇 달 전에 쓴 기사와 부분적으로 내용이 겹친다. 그러나 단지 적은 부분만이 겹치므로 두 글은 서로 다른 글이다. 독자들이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 보기

경제 제재는 ‘폭탄 없는 전쟁’이다

김승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한다. 미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 더 강경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면서 홍상그룹 등 북한 핵개발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이제 남은 건 군사 행동뿐”이라고 호들갑을 떨 만큼,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는 수많은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또 가해졌다.

유엔과 미국,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불량 국가”의 독재자를 궁지로 몰아넣어 북한 주민을 구해 내고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단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1990년대 미국과 유엔이 같은 논리로 이라크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역사상 가장 철저했던 이 경제 제재(1991~2003년)는 이라크 민중의 삶을 통째로 파괴했다.

결프전

1991년 1월, 미국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응징한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다. 아버지 부시 정부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묘사와 비슷하게) 사담 후세인이 ‘악마 같은 폭군’이라고 말했다. 언론에는 “전쟁의 종교, 이슬람의 위협”이라는 인종차별적인 광기가 논평을 지배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미친놈’ 한 명만 살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따라서 잔인한 군사 행동과 경제 제재 또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진정한 속내는 다음과 같았다.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 만의 석유는 전략적 힘의 원천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물질적 보상이다.”(미국 국무부)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사활적인 경제적 이익이 걸린 전쟁이다. 따라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미국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전쟁이 벌어진 42일 동안 이라크에는 폭격이 끊임없이 계속됐다. 대규모 공습의 목표는 군사 시설뿐 아니라 이라크 국민의 생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투하한 열화우라늄탄은 땅과 음식들을 오염시켰고, 독성 잔류물들은 강과 하수도로 스며들었다. 석유 시설, 정유 공장 등이 파괴되면서 유독성 물질 수천 톤도 대기, 토양, 수자원으로 쏟아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도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전쟁 전의 절반밖에 안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라크는 전쟁으로 너털너털해졌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대량살상무기의 해체”를 요구하며 이라크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다. 13년 동안이나 이어진 경제 제재는 전쟁의 연속이나 다름없었다. 황폐해진 땅과 사회기반시설들은 복구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됐다. “현재 이라크는 이렇다 할 대량 파괴 무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물을 배급받는 여성들 이라크 제재는 민중의 삶을 통째로 파괴했다.

(유엔 수석감시위원 스콧 리터)는 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미국은 깡그리 무시했다.

미국과 유엔경제제재위원회는 이라크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돈줄을 검열했다. 유엔 안보리는 “의료용 물품과 인도주의적 조건의 식량 수입은 허락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만듦고 유엔이 승인한 금지 목록인 “레드 리스트”는 수백 장에 이르렀다. “민군 겸용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된 물품(이른바 “이중용도 물품”) 목록은 전구, 양말, 손목시계, 바늘, 못, 직물, 곡물제분기, 쌀, 담요, 고무, 위생 수건, 주사기 등 끝이 없었다. 심지어 “연필에서 탄소를 추출해 비행기에 덧칠하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연필도 금지 물품이었다!

특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경제 제재로 물을 정수하는 데 사용하는 염소가 수입이 금지돼 오염된 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수로를 흘러갔고, 병에 담겨 팔리는 물조차도 오염돼 있었다. 이 때문에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풍토병이 됐지만 병원에는 응급 약품은커녕 전기도 안 들어왔다. 유엔은 화학무기 제조 가능성을 차단한다며 거의 모

든 약품 반입을 금지했다.

1991년 전쟁 전의 이라크는 세계에서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전쟁 전 이라크 소아과 의사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소아 비만이었다. 그러나 1999년 유니세프는 “1997년 5세 이하 아동 약 1백만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라고 추산했다. 의사들은 마취제와 항생제가 부족해서 항상 환자들 중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결정해야만 했다.

결국 매달 이라크인 5천~6천 명이 죽어 나갔다. 경제 제재 기간 동안 총 1백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그중 절반인 50만 명은 아동이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도 부유한 이라크인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신흥 밀수업자들, 위기에서 이득을 챙기는 교활한 투기업자들은 돈벌이가 되는 지하 시장을 통해 더 많은 권력을 얻었다. 후세인 정권도 1990년대 내내 권좌에 남았고, 오히려 미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다.

결국 경제 제재는 후세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이라크인들만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 제

재는 2003년 아들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점령해 더 끔찍한 지옥문을 열 때까지 지속됐다.

불량 국가

이라크에 화생방 무기 제조 능력이 없다고 유엔이 선언했지만, 빌 클린턴은 “경제 제재는 후세인이 권좌를 유지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오만한 발언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면 경제 제재는 더는 없다”고 밝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미국의 축복과 저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사담 후세인이 국제 사회가 원하는 만큼 기꺼이 양보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악마”, “불량 국가”로 낙인 찍었다. 그러나 누가 “불량 국가”인지 미국 지배자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중동의 친미 국가들은 제재를 받기는커녕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마음껏 짓밟았다.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사담 후세인도 이란을 견제해 줄 미국의 동맹이자, 중동의 골목대장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터 사담 후세인에게 전쟁 자금과 화학 무기를 지원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불량 국가”로 몰기 위해 자주 언급했던 1988년 이라크 할라브자의 쿠르드족 학살 때 독가스를 제공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미국은 이제 ‘오만하게’ 날뛰는 이라크를 벌하기로 결정했다. 더 큰 그림에서 미국은 1980년대 말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자 이라크를 공격해 중동에서의 석유 지배력을 다시 공고히 하고 군사

적으로 막강한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천명하려 했다.

물론 사담 후세인은 민중의 적이였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위선적인 제재와 개입은 평범한 민중의 삶을 더한층 파괴하기만 한다.

1990년대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위협을 부풀리면서 중동을 지배하고 그 능력을 과시해 궁극적으로 다른 열강들을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 대북 제재 강화는 호전적 조치를 더욱 자극하는 수단일 뿐, 그 과정에서 북한 민중은 불모가 돼 고통으로 내몰릴 것이다.

예컨대 미국과 유엔이 가하는 많은 대북 제재 조치 중에도 “이중 용도 물품” 제재가 있다.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민수용” 물품의 북한 반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7년간 제약회사를 경영했던 스위스 사업가 펠릭스 아브트는 이런 제재가 북한 민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평양 상수도 시설을 복구하는 프로젝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일부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대북한 제재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 [그리고] 2008년 유엔의 대북 제재로 … [제약회사] 약품 실험에 필요한 특정 화학물질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었다. 이 약품 실험은 농촌 마을 주민들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평양자본주의》, 펠릭스 아브트, HUI NE, 2015.)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북한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독재자의 지배와 제국주의의 개입에 반대해 일어서기를 바라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위선적이고 파괴적인 대북 제재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데, 박근혜는 제재 강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다.



트랜스젠더 해방을 위한 투쟁

지난해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문제가 큰 화두가 됐다.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로라 마일즈는 트랜스젠더 차별을 고발하며, 다양한 피억압 집단과 노동조합, 좌파 조직들을 아우르는 연대와 저항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로라 마일즈는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의 오랜 당원으로 《자금심, 정치 그리고 저항: 성소수자 해방에 대한 혁명적 길잡이》 등을 썼다.

일부 나라에서 상황이 악화하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의 진보가 이뤄졌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 그리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지배층은 올해 6월 올랜도 게이클럽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을 때 짐짓 분노하는 척했지만 정작 미국에는 성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보호법이 없는 주가 30여 곳이 넘는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혐오에 의한 차별과 폭력·살인에 너무나도 자주 시달린다. 1998년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한 후 해마다 11월 20일에는 활동가들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를 조직해 왔다. 이 행사에서는 해마다 혐오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낭독한다. 올해 11월 낭독될 이름 중에는 한데 카메르도 있다. 그는 터키의 트랜스 여성 활동가이자 ‘성 노동자’였는데, 올해 7월 강간을 당했고 강간범들은 그를 불태워 죽였다. 터키 경찰이 2년째 이스탄불 자금심행진을 금지하고 공격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 81명을 추모했는데, 이 수치는 실제 사망자보다 분명 적을 것이다. 미신고 살인도 많을 뿐더러 피해자의 젠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살인이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2015년 미국에서는 트랜스 여성 20여 명이 살해당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2014년의 갑절에 가까운 수치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은 멕시코였다. 멕시코에서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살해와 자살 사건, 트랜스젠더 혐오에 의한 폭력과 범죄가 발생했다.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됐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그렇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랜스젠더는 여전히 차별, 괴롭힘, 학대, 따돌림에 시달린다.

비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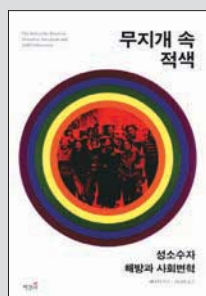
그래서 [영국 의회 산하] 여성·평등 위원회의 <2016 트랜스젠더 평등 조사>는 “일상적으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고강도의 트랜스젠더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30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그 중에는 트랜스젠더들이 사법 체계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항목도 있다. 2015년 말트랜스 여성이었던 비키 톰슨과 조앤 레이섬은 남성 교도소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 이 사건은 현재 교정시설에서의 트랜스젠더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트랜스젠더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트랜스젠더의 81퍼센트가 공중화장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특정 상황을 매우 꺼린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90퍼센트는 트랜스

젠더가 비정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38퍼센트는 성추행을 경험했고 6퍼센트는 강간 피해 경험이 있다. 37퍼센트는 물리적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19퍼센트는 실제로 물리적 공격을 당했다. 88퍼센트는 우울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고, 53퍼센트는 자해 경험이 있으며, 35퍼센트는 적어도 한 번은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다.

자산이 많거나 부유한 소수 트랜스젠더는 커밍아웃에 따르는 곤경을 잘 이겨낼 수 있지만, 대다수 트랜스젠더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다. 계급도 중요한 요인이다. 권투 시합 기획자 켈리 몰로니처럼 언론에 나와 “임대료 수익으로 성전환 수술비 10만 파운드를 낼 수 있었어요”하고 으스스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는 많지 않다.

추천 책



무지개 속 적색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해나 디 지움, 아나라 율김, 책갈피,
256쪽, 12,000원

일부 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다. 지난 4월 영국의 방송 프로그램 <처음 만난 세계>는 말레이시아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심각한 차별과 괴롭힘·학대를 다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트랜스젠더가 이슬람에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4년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정교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트랜스젠더는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편견에 찌든 폭력배와 파시스트들이 성소수자를 색출해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고무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다수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동성애는 불법이고 트랜스젠더는 명시받으며 폭력적 억압에 시달린다. 최근에 우간다에서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끔찍한 법안들이 제정됐다. 이런 법안 중 일부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연결된 종교 단체들이 사주한 것이다. ‘동성애와 젠더 전환은 서방에서 건너온 기행이고 서방 제국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프리카에는 없었다’는 거짓말도 흔히 동원된다. 동성애 혐오와 트랜스젠더 혐오가 반제국주의와 민족주의로 포장되는 것이다. 저술가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레슬리 파인버그는 이와 같은 역사 왜곡을 통렬히 반박했다. 젠더 전환과 동성애는 서방의 침략 이전부터 이미 아프리카에 흔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세계적 상황이 이런 만큼, 다양한 피

억압 집단과 노동조합과 좌파 조직들을 아우르는 연대와 집단적 저항이 매우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6월 [영국에서] 소규모의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이 의회 여성·평등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평등 조사 세션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트랜스 여성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트랜스 여성은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고 보는 몇몇 재생산 권리 활동가들과 급진 페미니즘 내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저명한 페미니스트 저메인 그리어와 줄리 빈델, 그리고 실라 제프리스가 이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논쟁

최근에는 이와 같은 논쟁이 대체 “여성”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캐스터 세메냐가 리우 올림픽의 800미터 달리기 종목에서 우승했을 때, 인종 차별과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인터섹스(간성)에 대한 반감을 뒤섞은 굉장히 역겨운 편견들이 난무했다. 2015년 캐사 폴랏이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에 기고한 기사 ‘낙태는 누가 하는가’는 용어와 정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 논쟁은 정체성 정치의 이론들이 지닌 분열적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정체성 정치는 자본주의 하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핵심적 측면이 제공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난민 위기를 악화시키는 유럽연합의 정책

김중환

10월 2일 헝가리 정부가 실시한 난민 거부 국민투표가 무효화됐다.

헝가리 우파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반년 넘도록 막대한 예산을 쓰며 난민 거부표를 선동해 왔다. 또한 “헝가리에서 난민 거부를 통과시켜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유럽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를 바랐다. 반면 난민을 지지하는 쪽은 국민투표 보이콧을 호소해 왔다. 그리고 투표율(43퍼센트)이 국민투표 성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의 반난민 정책 강화 기도가 타격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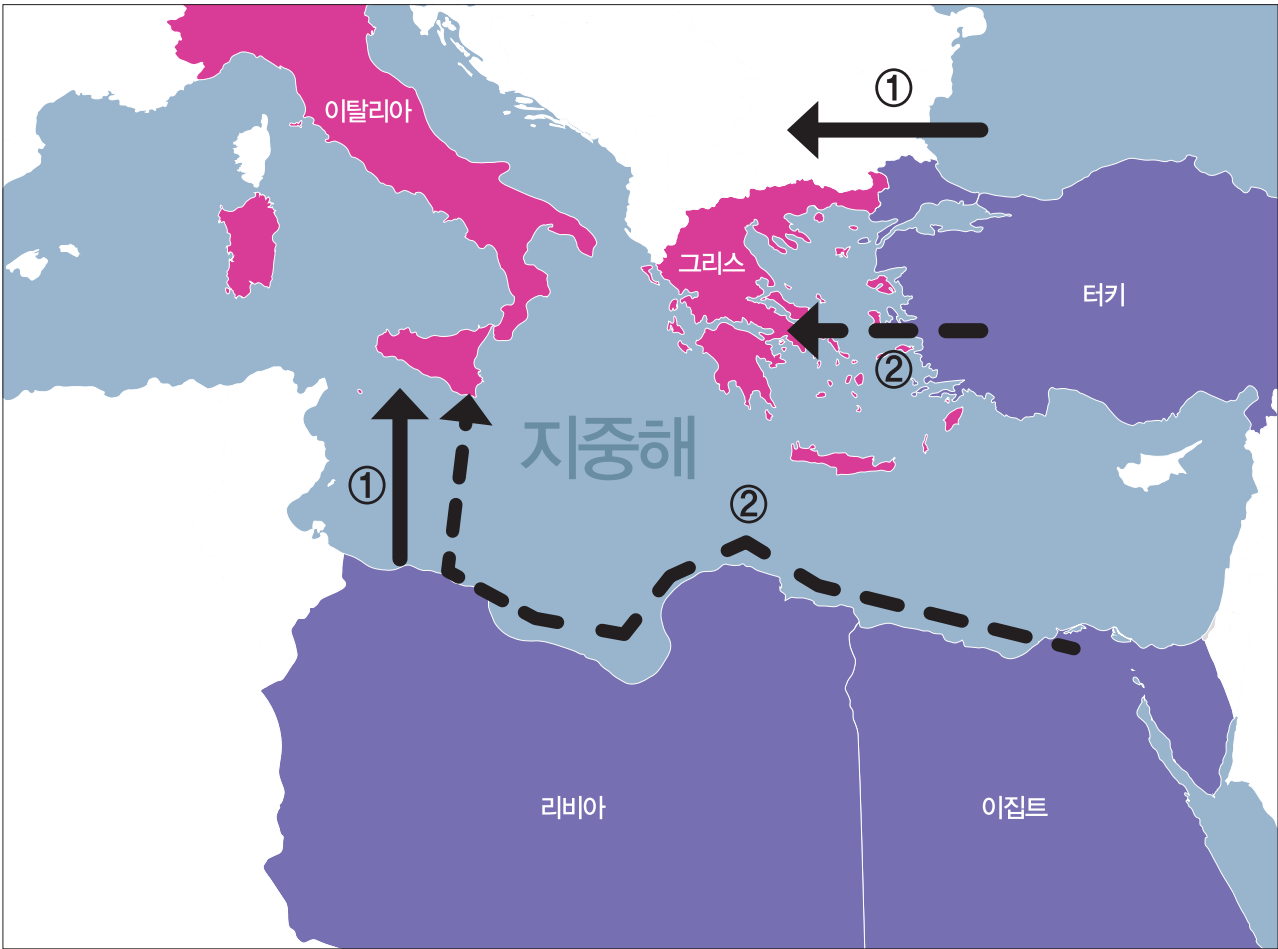
헝가리 국민투표를 촉발한 것은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이다.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은 유럽연합 외부적으로는 국경 단속을 강화해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독일은 ‘난민 신청은 자신이 처음 발

디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유럽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다수 난민은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나은 독일로 가길 바란다. 그런데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 다수가 독일로 가려면 다른 나라를 거쳐야 수밖에 없다. 고무보트나 조악한 여선을 타고 지중해와 대서양을 지나 독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권이나 비자를 구비하기 힘든 난민들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내놓은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의 핵심은 지리적으로 유럽연합의 외곽에 있고 난민들이 주로 경유하는 나라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게다가 그 규모는 유럽연합 국경수비대 프론텍스가 추정한 난민 유입 규모(지난해에만 1백80만명)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난민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난민의 유럽 유입 경로 변화〉 육로이거나 비교적 짧은 뱃길이었던 경로 ①에서 더 위험하고 먼 경로 ②로 바뀌었다.

더한층 위험한 루트로 내몰리는 난민들

9월 말 난민을 싣고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배가 전복돼 최소 2백명, 많게는 4백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비극의 책임은 유럽연합의 국경 단속 강화에 있다.

원래 중동 출신 난민들은 유럽으로 갈 때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육로를 이용했다. 그러나 철책이 설치되는 등 길이 막히자 난민들은 더 위험한 해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해상 순찰을 강화하며 난민을 더 위험한 루트로 내몬다. 또한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터키로 강제송환시킬 수도로 했다.

한편,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은 리비아

→ 이탈리아 뱃길을 이용해 왔다. 유럽 지배자들은 병력 1천2백 명을 보내 이길도 막으려 한다. 또한 “이주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튀니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난민의 유럽행을 막으면 총 6백20억 유로(약 77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돈다발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난민들은 한층 더 멀고 위험한 항로를 택하고 있다. 이탈리아로부터 무려 1천5백 킬로미터(부산~백두산 왕복 거리) 떨어진 이집트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안전한 교통수단이 제공됐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난민 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

올해 상반기 유럽 전역에서 난민 자격을 새로 신청한 사람은 60만 명이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3개국 출신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서 보듯, 제국주의 개입이 ‘난민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다.

전대미문의 규모라지만 결코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난민 신청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독일에서조차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난민 신청자는 독일 전체 인구의 1.2퍼센트에 불과하다.

유럽의 지배자와 우익들은 이주민·난민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가 사라진다고 떠든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솔한 연구 결과들은 이주민 수와 임금 하락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많은 경우 이주민 유입은 해당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 오히려 지배자들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외주화, 민영화가 임금 하락과 일자리 축소의 주요 요인이다.

이주민들은 ‘내국인’들보다 복지 혜택을 적게 받는다. 무상의료로 유명한

영국의 경우, 이주민이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는 같은 연령 영국인의 절반밖에 안 된다. 영국 의료제도의 후퇴는 예산 삭감 때문이지 이주민 탓이 아니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려고 이주민·난민을 속죄양 삼는 것이다. 진정한 대안은 전쟁 물자와 기업 떠받치기에 사용하는 막대한 돈을 난민을 돕고 평범한 사람들의 임금과 일자리와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파시스트 정당에 맞서다

3년 전인 2013년 9월 18일 그리스의 유명 힙합 가수이자 반파시즘 활동가 파블로 피사스가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 당원들에게 살해됐다.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활동가들은 피사스 사망 3주기를 기려 9월 17~19일 항의 행동을 벌였다. 이 행동에 수천 명이 참가했다.

교사, 병원 노동자, 항만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은 조합원들에게 반파시즘 항의 행동 참가를 독려하며 19일 월요일에 수도 아테네가 포함된 아티카 지역에서 3시간 파업을 벌였다. 덕분에 많은 노동자들이 평일 오전에 열린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공공부문노총 집행위원회는 파업 결정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는 긴축안에 맞서, 민영화에 맞서, 난민 연대 운동을 지지하며 투쟁을 벌일 것이고, 이 운동들을 반

파시즘 투쟁과 연결시켜 살해범과 황금새벽당이 처벌받도록 애쓸 것이다.”

황금새벽당은 경제 위기와 긴축이 낳은 좌절감, 지배계급이 퍼뜨리는 인종차별을 이용해 급성장했다. 2012년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18명을 배출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자신감을 얻은 황금새벽당이 거리에서 이민자와 좌파 활동가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일이 부쩍 증가했다. 피사스 살해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구가 66만 명인 아테네에서 5만 명이 넘게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전국에서 비슷한 시위가 일어났다. 이 운동은 때마다 예정돼 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긴축 총파업과 맞물렸다. 당시 황금새벽당을 연립정부에 끌어들이려 한 그리스의 우파 정부는 운동의 압력에 밀려 황금새벽당 지도자들을 범죄 단체 결성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다. 그 뒤 황금새벽



그리스 국영 방송사 ERT가 황금새벽당을 우호적으로 보도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

당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반대 투쟁 경험은 반파시즘 투쟁 같은 정치 쟁점을 둘러싸고도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이 발휘되는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운동의 진전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차승일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핵발전소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위험한 산업

장호중

지난 9월에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은 하루 만에 경주와 울산, 부산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멀리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한 달 가까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에 지진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있다는 보고서와, 이 보고서를 정부가 4년 넘도록 은폐해 왔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주장은 20여 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핵발전소가 밀집된 ‘고리·월성 일대가 활성단층대로, 30년 이내에 한번은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6년 9월 20일치)

현재 고리(부산 기장군)에는 7기의 원자로(정확한 명칭은 핵반응로)가 있고 월성(경주시)에도 6기의 원자로가 있다. 월성 핵발전소는 이번 지진 때문에 기준치 이상의 진동을 겪어 1~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특히 월성 1호기는 땅이 고르지 못해 이미 기울어져 있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니 누구든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를 떠올릴 것이다. 당시 사고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핵반응로 4기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65년 전 미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의 1백68배나 되는 방사성 세슘 137이 대기 중에 유출됐다. 폭발 이후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직도 핵반응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 완전히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제어할 수 없게 된 핵반응로를 조금이라도 식히려고 5년간 퍼부은 물로 후쿠시마 앞 바다는 물론 태평양 전역에 방사성 물질이 확산됐다. 이 위험한 물질은 자연의 순환을 따라 생태계에 축적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 게시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수산물 검사 대상의 11퍼센트에서 세슘 134와 세슘 137이 검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2015년 5월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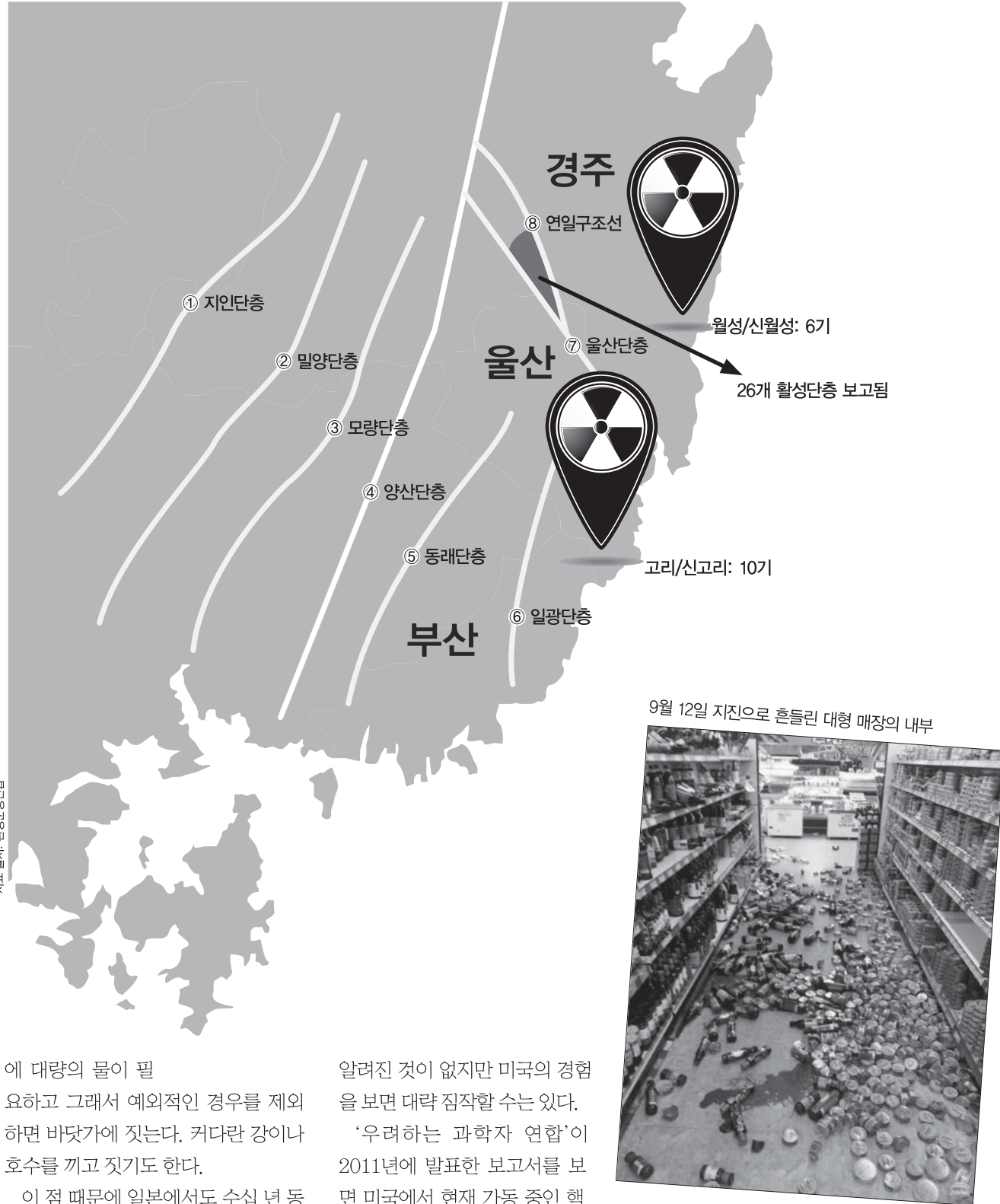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군색할 수밖에 없다. 정작 국내 핵발전소 사고는 쉬쉬하며 숨겨온 데다가 ‘소량의’ 방사선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꺼지지 않는 불

후쿠시마 핵 사고는 핵발전이 애당초 얼마나 불안정한 기술인지 잘 보여줬다. 당시 사고는 지진 해일로 전기가 끊기고 발전기마저 물에 잠겨 냉각 장치가 멈춘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

핵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열로 물을 끓여 수증기의 압력으로 발전용 터빈을 회전시킨다. 문제는 핵분열을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멈추는 것은 어렵다는 데 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모든 핵발전소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냉각 문제다. 냉각 때문



자료 출처: 환경운동연합

에 대량의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바닷가에 짓는다. 커다란 강이나 호수를 끼고 짓기도 한다.

이 점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십 년 동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위험이 지적됐는데도 바닷가에 핵발전소를 지어 운영했다. 한국에서도 지진 위험을 애써 못본 체하며 월성과 고리에 핵발전소를 지어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수많은 안전 장치가 있다 해도 어떤 이유로든 냉각수가 돌지 못하는 순간, 핵발전소는 통제불능이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다.

핵발전소 경영자들은 불량 부품을 공급받는 대신 뇌물을 받아 왔고, 조그만 사고는 물론 큰 사고도 은폐해 왔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해 할까 봐’라며 지질 조사 결과를 비롯해 핵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숨긴다. 심지어 월성 원전의 경우 일부 지진계가 고장 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이후 폭로됐다.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설치한 ‘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의 80퍼센트는 성능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안이 있나?

핵발전이 경제적이란 신화는 많이 약화됐다. 당장 2017년 6월이면 영구 폐쇄될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고 해체하려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토지, 핵연료, 기술 개발 등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핵발전은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에서 핵발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미국의 경험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는 있다.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이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생산 원가의 70~100퍼센트에 이른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핵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문화재단은 현재 핵발전량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88퍼센트(가구당 연간 50만 원) 인상된다고 보고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이 비용은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비용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깎아주지 않아도 가게의 추가 부담 없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 전기요금과 똑같이 거두면 늘어나는 수입이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의 83퍼센트나 된다.

결국 정부는 재정(세금)으로 핵발전소 건설·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전 ‘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세금과 비싼 전기요금 같은 부담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핵발전과 핵무기

한국 지배자들이 엄청난 위험과 재정 부담을 무릅쓰며 핵발전에 집착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박정희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들통나 미국의 경고를

받고 그만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등을 시도해 왔다.”(IAEA의 2004년 감사 보고서) 한국 정부는 오랜 노력 끝에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 9월 22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생존을 위한 핵무장 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연설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플루토늄 내폭형 핵폭탄 설계 도면을 보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설계도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대학원생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핵물질도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실험 모든 시설을 폐기했지만 머리 속에 다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월성 1~4호기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쌓여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4천5백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발전은 평범한 노동계급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기는커녕 안전을 위협하고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핵전쟁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핵발전소는 모조리 폐쇄돼야 한다.

방사선과 건강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를 발표했다. 20년에 걸쳐 3만 6천1백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서 정부는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생 위험성 간에 인과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과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종결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등은 같은 자료를 재분석해 2년 만에 정부의 분석이 엉터리였음을 밝혀냈다. 결론은 정반대였다.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가 2006년에 발표한 것인데, 이 연구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 조금이라도 방사선에 더 노출되면 그만큼 더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 ‘기준치’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뜻하는 것이지 그 이하는 안전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이 기준치는 50배 가까이 높아진다. 물론 인체의 저항력이 갑자기 50배 커지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이런 연구를 수행했어야 할 세계보건기구(WHO)는 1959년 5월 28일 핵발전 확산 기구인 IAEA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WHO가 핵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려면 IAEA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 이후로 WHO는 방사능과 건강에 관한 아무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핵산업계의 일원이거나 그들의 후원을 받아 온 일부 과학자들은 방사선의 유해성을 과소평가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핵산업계 인물들이 정부의 핵발전 규제 기관과 대학의 연구소 등을 옮겨다니는 회전문 현상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문주현 동국대 교수가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를 수행한 이력이 폭로돼 물러난 바 있다.



현대차의 임금 공격은 노동개악의 중요 고리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정부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세 달간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3조 원 가까이 생산 타격을 가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12년 만에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금융·공공 부문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이 한창인 가운데 벌어졌다. 정권의 위기를 틈타 투쟁이 확산되자, 정부는 서둘러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더한층의 권력 누수를 막고 노동개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9월 28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이 '현대차 파업이 지속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업포를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경총·보수 언론이 한목소리로 긴급조정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들의 강력함이 아니라

위기감의 발로다.

박근혜 정부의 상황 통제 능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은 긴급조정권 협박에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 9월 30일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는 5~6천여 명이나 모였다. 현장 곳곳에는 강력한 투쟁을 호소하는 대의원회·현장조직위원회·현장서클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현대차지부 박유기 지부장은 '긴급조정권에 굴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노동자들은 올해 사측의 임금 공격(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악)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해 왔다. 지난 8월 말에는 박유기 집행부의 잠정합의안이 78.5퍼센트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경제 위기와 수익성 하락 때문에 정부와 사측은 상당한 투쟁 압력이 없으면 양보보다는 공격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애써야 한다.

긴급조정권 협박은 당장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투쟁을 자제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전에 투쟁을 지속·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끝까지 길게 싸우자"는 말은 파업 수위를 낮춰 사측에 여유를 주고 노동자들의

투지에 감을 뺄 위험이 있다.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옳지만, 주 1회 4시간 파업 정도로 투쟁 수위를 제한한 것은 매우 아쉽다. 김성락 집행부는 올해 내내 현대차지부 뒤에 숨어 파업을 자제해,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현대차 해바라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같은 사용자에 맞선 투쟁이므로, 기아차지부도 투쟁 수위를 올려 함께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1백10억원을 갚다 바치고 한전 부지 매입에 10조 원을 투척한 현대차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백10조 원이 넘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 강력한 조직과 힘이 있는 현대·기아차지부가 박근혜의 위기를 심분 활용해 단호하게 투쟁한다면, 임금 공격에 제동을 걸고 양보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은 공장 담벼락 밖의 전체 정세와 세력관계 속에 임투를 자리매김하고,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며 투쟁을 선동해야 한다.



박설

지난 7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열린 파업 집회.

사진 출처: 현대차노조

파업에 나서는 화물 노동자들

철도 파업과 결합되면 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다

전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9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경 집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총회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즉각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으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10월 초중순 경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고, 곧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에 맞선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되자, 보수 언론들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 도미노'라며 비난을 시작했다. 그러나 상경 집회에서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이 말했듯이, 정부가 진작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도로 안전은 상당히 개선됐을 것이다.

화물차 사고로 하루 세 명꼴로 목숨을 잃는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화물

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네 시간 운전 - 30분 휴식'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30분 휴식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화물연대가 조사한 것을 보면 차량 할부값,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한 화물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을 시간 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주일 내내 집에 못 가고 화물차에서 '쪽잠', '갈치잠'을 자며 일해도 빚만 계속 늘어요."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었던 화물차도로비 전일 할인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기름값, 도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할인이 적용되는 야간운행을 12~14시간씩 해야 한다.

이렇게 누적되는 피로, 화주와 운송업체들의 과적 강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30분 휴식'만으로 도로안전 개선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호주에서는 2012년에 도로안전운임법을 제정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압박이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물 노동자를 위한 표준운임과 기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도로 안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입제

반대로 화주, 운송업체들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능케 하는 지입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이다. 화물 노동자들이 2003년 5월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지입제 철폐, 지입차주 차량소유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도로비 할인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박근혜 정부도 지입제가 문제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2014년 위수탁계약을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 6년" 동안만 이를 보장한다는 단서를 달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정안이 되었다.

"25년간 꼬박꼬박 지입료를 내왔는

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번호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번호판 내놓기 싫으면 번호판값 2천5백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1천5백만 원을 내고 다시 번호판을 돌려받아 차를 몰고 있어요."

계약 기간이 6년을 넘긴 경우에는 지입회사에서 얼마든지 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횡포를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화물 노동자들은 "내가 빚내서 산 차를 내 차라고 부르지 못하는 더러운 현실"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 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지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관련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 정부는 화물업종의 톤급별 구분을 없애고, 1.5톤 미만 소형화물차 수급 조절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화주, 운송업체들은 운송료 인화와 과적을 강요하기가 더 쉬워진다. 새 번호판이 늘어나는 만큼 지입회사에게는 지입료 수입과 번호판 장사를 할 기회도 늘어난다.

반면 노동자들은 기존·신규 노동

자 모두 낮은 운임, 장시간, 과적 운전으로 고통만 떠안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고통만큼 도로에서 위험도 높아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과 도로 안전을 위해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에 대규모 직위해제를 단행하고, 현대차 파업에 군사정권 시대의 낡은 유물인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근저에 노동자 적대, 부패와 독선으로 찌른 정권을 향한 대중적 반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철도 파업에 화물 노동자들이 가세하면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연대 파업이 이뤄지면, 화물 노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처럼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파업에 나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우성